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선택 아닌 필수 ❸ 공공기관 과냉방 심하다

‘피서지’ 오명 벗기 실천이 중요

은행·백화점 고객 유인 위해 ‘꽁꽁 냉방’ 일쑤

적정온도 한참 아래 … 과다 조명도 낭비 주범

백화점이나 은행, 공공기관 등은 대표적인 에너지 과잉 사용처로 꼽힌다. 하루 종일 고객 및 민원인들로 붐비는 건물의 특성상 실내온도나 조명의 밝기에 따라 매출이나 실적·효율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들 업계는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에너지 과잉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 공공기관의 경우 대낮부터 조명을 환하게 밝히는가 하면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유통업체와 은행들이 에너지 ‘짠돌이’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만큼 ‘고유가’ 문제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움직임에 속속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월부터 매장 내 온도·공조기 가동시간과 광고탑·외부등의 점등시간을 조정하는 등 에너지 절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4개월간 1천70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줄였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롯데백화점도 조명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 점등시스템을 설치했으며, 각 층별 공조기를 통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6.6%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봤다.

금융권의 에너지 절감 바람도 거세다. 광주은행은 하루 3회에 걸쳐 사무실과 화장실의 전등을 일괄 소등함으로써 전력 낭비를 막고, 실내온도를 여름철 적정온도(26~28도)로 유지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이들 업계의 에너지 절감 의지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내온도에 따라 매출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만큼 무더위가 시작되면 과잉냉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각 기관이나 업체들이 여름철이 시작되자 마자 경쟁적으로 실내온도를 낮춤으로써 에어컨 과잉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지역 101곳의 실내온도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적정온도를 크게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판매점의 온도가 24.7도로 가장 낮았으며, ▲대형 마트(24.8도) ▲금융기관(24.8도) ▲이동통신 대리점(25.4도) ▲공공기관(26.3도) 등이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과도한 에어컨 사용은 물론이고, 퇴근 시간 이후까지 조명을 환하게 밝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고유가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절감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김광훈 사업국장은 “지역 업체나 기관들은 평소 에너지를 아끼다가도 여름철만 되면 과잉 냉방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사상 최악의 고유가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필요없는 전등을 끄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부 잘못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손대표, FTA 등 ‘야당 책임론’ 거듭 제기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의 정국경색 상황을 놓고 ‘야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손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 정부를 탓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잘못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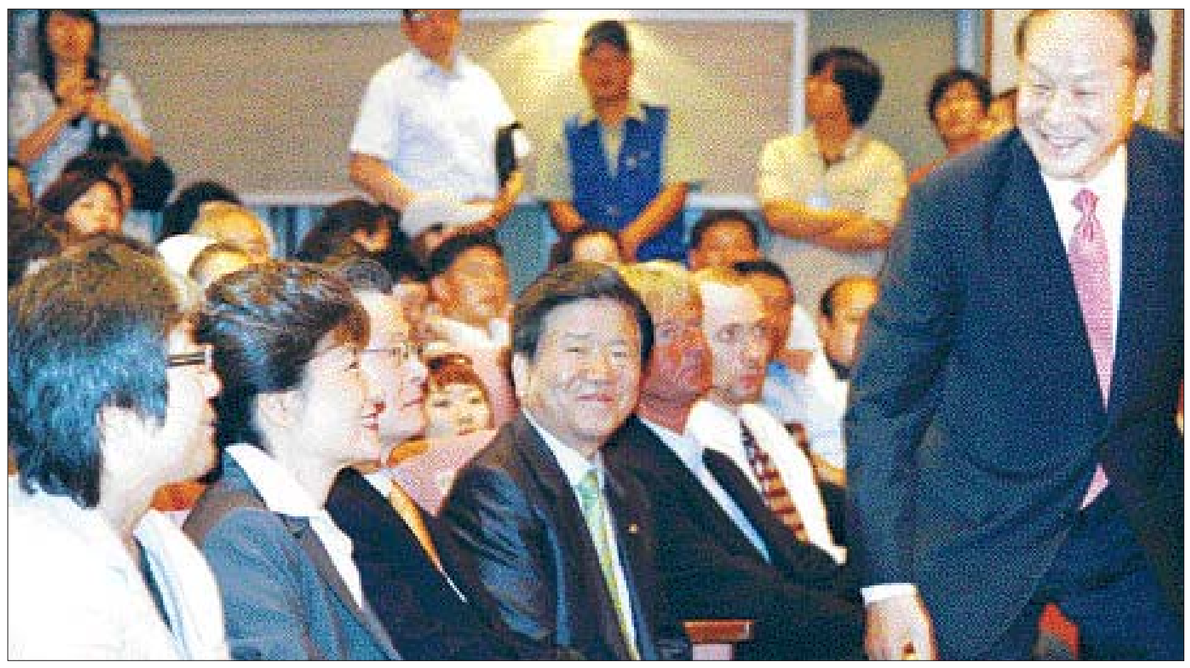
손 대표는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자연을 책임지고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또, 경제성장과 민복도 책임지고 한반도 평화도 새로운 각오로 책임지겠다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난 26일 18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지연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다.

손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정운천 농림장관 해임건의안 부결사태 이후 민주당의 민의대변 역할과 정책대안 능력에 근본적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여론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김효석 원내대표는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는가 하는 것은 확실히 보여줬지만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뉴 웨이(New Way)를 가려고 했는데, 쇠고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에 단호히 투쟁해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적 정책을 만들면서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함께 보이는 것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웃고는 있지만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자를 다룬 영화 ‘크로싱’ 시사회에서 만나 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경유 세율 인하·경유차 보조금 검토

한나라, ‘생계형’ 사용업자 대책 추진

경유값 폭등으로 전국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차를 세우는 등 심각한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7일 유가 폭등으로 해를 입는 화물차주 등 생계형 경유 사용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따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정부에 생계형 경유 사용업자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토록 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개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값이 너무 올라 기름위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피해를 당하는 서민 생계 문제의 대책을 광범위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우리도 정부 및 국민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싸게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명진 원내부대표도 “영세 자영업들을 비롯한 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정부가 시장의 법칙에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신경한 것인지 정말 걱정된다”면서 “빨리 경유세율을 인하해 주든지, 생계형 경유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유가 상승으로 어민과 자영업자, 지입형 화물차주, 축산농가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생계형 경유 사용업자들이 입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 공무원 “쇠고기 재협상하라”

이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장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에서 이번 협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농식품부지부장은 27일 개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 굴욕 협상이며 국민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화된 사료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0개월이상 쇠고기까지 풀어준 점, 미국 도축장 승인 권한을 90일까지만 우리 정부가 갖는 점, 우리 조건이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은 뒤 수입조건을 맺은 멕시코·말레이시아보다 약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지부장은 “무능하고 무소신하고 자기 영달만 고민한 장관과 (협상)대표가 단 하룻밤만에 미국측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에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즉각 미국과 재협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 입장 발표는 협상 과정 자체에 대한 것이지,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본의 아니게 수입 쇠고기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다는 비약으로 발전하거나 국민의 막연한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힐러리도 FTA 비판

부시에 서한 보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를 미국 의회에 요청하기 전에 우선 한국의 미국 무역관련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데 이어 힐러리도 한·미 FTA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한·미 FTA가 올해 안에 미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힐러리는 지난 21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과 함께 미시간주 출신 데비 스테이브나우 상원의원 주도로 작성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미 FTA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

/연합뉴스